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현수막게시대 이전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동) 소재 ○○○○○○ ○○○○○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로,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현수막 게시대에 불편을 느껴 20○○. ○○. ○○. 및 20○○. ○○. ○.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게시대 이설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 ○○. 및 20○○. ○○. ○○. 해당 게시대는 인천○○ 지역주택조합과 협의에 따라 현재 위치로 이설되었고, 현장 확인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이하 피청구인의 각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아파트 정문에 자리 잡고 있는 게시대가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택조합과 협의 하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전불가 통보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 이관되어 똑같은 사람이 답변하여 결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

나. 현수막 게시대가 조망권 침해와 조형물을 가려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불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가 좌측 시야를 가리고 소화전을 가리고 있어 화재시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주택 조합과 협의 하에 설치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택조합은 머지않아 해산될 조직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에 피해를 주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를 못해주고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관할청 태도에 합리적인 심판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해당 게시대는 ○○동 주거복합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시 인천○○지역주택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현재 위치로 이설되었으므로, 재이설을 원할 경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 가능하다.

나. 게시대와 차량진출입로의 거리가 있어 시야 가림 등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소화전 관련 주장은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동 주거복합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에 따라 〇〇〇구청 △△△과에서 〇〇지역주택 조합에 위치 협의 공문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20〇〇. 〇〇. 〇〇. 피청구인과 인천〇〇지역주택조합에서 현수막게시대 이설 대상지를 확인하고,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협의에 따라 20〇〇. 〇〇. 〇〇. 현수막 게시대 이설공사가 실시되었고, 20〇〇. 〇〇. 〇〇.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공단에 현수막 게시대 이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국민신문고를 통해 게시대 이설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행정심판 종류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그 중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제3호에서는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2) 대법원은 행정심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하고 있고, 거부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국민의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판결).

3) 청구인은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 소방 관계 법령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없고,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

적법한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